

2005년 신년기자회견 모두연설 및 질문·답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신 기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좋은 일, 그리고 꺾은 일이 참 많았지만, 내내 경제 걱정만 한 기억 밖에는 없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연초부터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정부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투입해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민간자금을 공공투자로 끌어들이는 종합투자계획도 조기에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내수와 투자부진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도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문제는 서민생활입니다.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더라도 서민들은 그 효과를 가장 늦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 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 보호자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월 말까지 신용불량자 해소대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가 두려워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함부로 손댈 수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민용 소형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대출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산층도 임대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도 더욱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서민·중산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도 저리로 최장 20년까지 상환하는 장기대출제도를 올 2학기부터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적어도 학비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해서 치매·중풍 등으로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전달체계를 개선해서 빈곤·소외계층이 곤경에 처했을 때 보호조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법적 절차를 갖추어 나가는 '선 보호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서민복지는 역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직업상담과 알선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국적인 직업안정망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대책은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있습니다. 경기는 시기와 속도가

문제일 뿐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회복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업간, 기업간, 또는 근로자 상호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출이 30% 이상 증가하고 경제도 5% 가까이 성장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통은 매우 큽니다. 심지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늘어나도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해서 필요한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첨단제품의 수출은 크게 증가했지만, 전통산업은 오히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 동남아 국가들에게 밀리고 있는 부문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순이익이 1조원을 넘는 우량기업이 늘고 있는 반면에,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 못하는 기업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부문은 더 빨리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분야는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경기를 심하게 타는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서너 배나 되는 것도 체감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묘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경기가 좋아져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어 왔습니다. 더 이상 양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은 물론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의 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혁신하고 인재를 육성해서 중소기업과 같이 뒤쳐진 분야는 조속히 따라붙도록 지

원하고,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서 근로자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용과 성장이 함께 가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보호·육성 차원을 넘어 기술과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다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창업이나 사업전환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수요자인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이미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지역특성에 맞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이 서로 협력하는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신발·섬유·식음료 등 주로 지방에 많은 전통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왔고, 상반기 중에는 이 부문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여러분도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쌀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농어민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곧 확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대기업과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첨단분야는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지방, 수출과 내수,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관건은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인재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1990년만 해도 33%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은 지난해 81%로 대폭 증가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더욱이 핵심기술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학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물론 강점이 있는 분야는 중점 육성하고 취약한 부문은 스스로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폐합 노력은 그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산업간·기업간 양극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해결해야 할 큰 과제는 근로자간의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서 더 좋은 일자리나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훈련 기회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의 훈련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훈련을 제공하는 '이동식 직업훈련 서비스'를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누구나 뜻만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양호한 정규직, 특히 대기업 노동조합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소수에 대한 두터운 보호보다는 다소 수준이 낮더라도 다수가 폭넓게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여러분도 능력 개발을 통해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서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초에 제가 선진경제, 선진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을 구호로만 내세우고 막연한 미래로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세울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제 활동도 역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경제도 선진경제를 얘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선진한국을 향한 분명한 목표를 내세우고 노력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공업 시대를 지나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중화학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전자산업에서는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을 뿐 어느새 선진국 문턱에 바짝 다가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면 다음 정부가 출범할 때 선진한국호의 열쇠를 넘겨 주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과 같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지식 서비스 산업은 그 자체로서 부가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류기업을 키우는 핵심적인 인프라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기업지원 서비스가 크게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금융은 아직 신용평가 능력이 취약하고, 컨설팅·법률·회계 등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서 국민의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교육열과 성취동기가 높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달려들면, 이들 분야에서 선진국들과 겨루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관광·레저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대중적인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에 서남해안 등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구체화되도록 해 나갈 작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세계 12위의 무역 대국으로서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개방과 경쟁체제 아래서 학습과 혁신이 일상화될 때 경제의 선진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방향은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에 전달될 것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서비스 산업 육성과 개방형 통상국가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선진경제의 토대를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끝으로 선진한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한국은 경제만이 아니라 제도와 의식, 사회 전반의 문화가 선진화됐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선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식도 성숙되어야 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패청산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고개입니다.

역대 정부 모두 부패청산을 다짐했지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 정치부패를 근절하는 전기가 마련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투명성지수는 OECD 30개국 중에서 24위에 불과합니다.

부패도 문화입니다. 확실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적 통제야말로 가장 강력한 부패추방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은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선진한국의 필수요건인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챙기는 데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동계와 정치권도 함께 힘을 모읍시다. 저와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60주년인 올해를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듭시다.

남북관계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다른 관심사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질문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 회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대통령 ●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상대가 있기 때문에 희망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하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가 응한다면 주제에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안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 여러 번 설명한 일도 있습니다.

흥정도 마찬가지로듯이 가능성이 낮은 일에 자꾸 목을 매면 협상력이 떨어지죠?

물건도 자꾸 사자고 매달리면 값이 비싸지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할 때, 그야말로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협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분위기만 자꾸 띄우는 것은 결코 크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 안에서 저는 북핵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6자회담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도, 그리고 또 부정적일 경우에 대비하는 다음의 대비책에 관해서도 저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희망만 가지고 6자회담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문 ● 경제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셨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성과를 종합적으로 계량화해서 정책목표를 자체적으로 평가·발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 지금 경제성장이나 고용 면에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기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재계 총수들과 개별적으로 편하게 만나서 기업이 원하는 규제완화나 투자유치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 ‘경제살리기’가 대통령이 말해서 되는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데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도 경제를 살리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량적 목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일자리가 42만개 정도 늘어났습

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어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지고 일자리의 품질이 나빠져서 실업통계상 일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자기가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의 내용이 나빠진 것입니다. 소위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격차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량적으로 보면 지난해 목표 42만개를 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관한 것은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1월중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때 국민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가 있으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량적 지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생태계 자체가 지금과는 좀 달라지도록 중소기업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꼭 해내겠습니다. 달라지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니라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서민생활이면 좋고 중소기업 정책쯤 되면 그래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재벌 총수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것인데 못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가끔 만나서 고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사업에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의 경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 뿐만 아니고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흔히 얘기하듯이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투자를 독려하라.’ 이런 차원의 만남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관치경제의 시대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슨 규제나 권력으로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더욱이 금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에 자금압박을 가하던 시대도 이미 1998년 IMF 환경이 오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공개되고 투명한 정책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한 번 만나서 등 두드려 줘서 사기 살린다는, 그래서 기업의 사기가 살

고 투자가 늘어난다는 그런 사고는 이미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투자의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투자의지가 아닙니다. 아주 합리적인 투자의 계산,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 어떤 도전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경제단체의 간부들이 말하고 있는, 조용히 만나서 애로사항 들어 주고 투자를 독려하고 하는 그 방식은 과거 제왕 시대에 하던 일이지 민주주의 지도자 시대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남에서 제가 줄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일 큰 고민은 만나도 개별적으로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격려가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질 문 ● 대통령께서는 지난 연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송년만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조급하게 굴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올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과거사 청산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 청산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변화가 있으신 것인지, 또 입장변화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큰 원칙을 선언했고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생각은 생각으로 받아 주시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은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에 관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은, 생각은 표현하지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확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개 다 국회에서 토론과 의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 때의 이야기는 그냥 덕담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당의 국회운영 전략은 당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시오. 일절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정부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역시 포괄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위해서 이리이러한 법은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요청 그 이상으로, 그것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협상을 어떻게 하고 전략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국회운영에 관해서 잘해 오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덕담하고, 이어서 ‘어려운 문제가 많겠지만 좌절하지 말고 하나 둘씩 차근 차근 풀어 갑시다. 그 당시 한꺼번에 다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예측이 되길래 너무 안 되더라도 지도부가 어렵게,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풀어나가자.’ 고 하는 격려, 포괄적 격려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입니다. 결국 저는 당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전략에 관해서 이 시점에 언제까지 통과해야 된다,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대통령이 못 박아서 당의 자율성에 영향을 끼치고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때때로 그 자리의 환경 때문에 덕담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것의 필요에 의해서 표현이 약간씩 누그러지는 일은 있지만 과거사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의 문제이고 역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역사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보편적 흐름을 우리 한국만 따로 거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제 생각은 변화가 없지만 문제해결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해

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큰 원칙을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점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싶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국회에서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 국회는 금년 말까지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승인하였습니다. 한국군이 승인된 기간 이후에 계속 이라크에 주둔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인 두 명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추가 질문은 북핵문제에 대한 것인데, 6자회담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 한국인 두 명이 납치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확인 중입니다.

그 다음에 6자회담이 열릴 시기에 관해서는, 이제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사유는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느 시점에 열리게 될지는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틀리면 실수처럼 보이니까요.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외교팀이 정비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라크에 나가 있는 우리 자이툰 부대가 언제까지 잔류하고 철수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은 항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의 범위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 목적이 결국 이라크의 평화와 질서가 안정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 미국과의 협력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는 함께 참여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참여하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생각하는 시점, 그때까지가 우리 군대가 주둔해야 되는 시점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 특별히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

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상황대로라면 끝까지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 ● 대통령께서는 경제활성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주요 국정개혁과제, 소위 말하는 국가보안법 등을 포괄했을 때도 좀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권 3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성장과 분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총액제한제라든지 증권집단소송제를 놓고 당·정이 엇갈리는 견해를 낳았고, 당·정 합의사항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권한을 좀 명확히 해서 시장에 하나의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 경제와 비경제 분야의 정책을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또는 배타적 선택의 관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경제법안에 걸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하려고 하다가는 경제법안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관계가 발생해 버린 것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걸고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경제법안과 국가보안법을 동시에, 이번에 통과시킨 법보다 몇 배로 더 많은 법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제는 경제대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국정원에서 과거사 조사한다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는 것 있습니까? 국방부에서 과거 군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의혹사건에 관해서 진상을 밝힌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묶어 내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경제를 내세워서 일부 개혁법안들 발목잡기를 하고, 그 발목잡기 때문에 경제법안까지 연말에 발목이 묶였고, 예산까지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될 뻔했습니다. 예산은 적어도 12월 중순까지 통과시켜 줘야 지방에 보내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고,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각 부처도 예산집행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보름 이상이나 묶어서 정부가 연초에 예산 편성하느라 새 해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많은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경제살리기가 아니고 정치적 입장 살리기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기득권 살리기 아닙니까?

성장과 분배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성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분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게 그것을 물어 보는 사람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 잘하고 있는 나라에서 성장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분배 소홀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하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나라는 두 가지 다 시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알려져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한 국가도 성장과 분배문제 때문에 경제가 침체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퓰리즘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경제이론이 한국에서는 마치 통설인양 왜곡돼 있습니다. 아직 정설로 정립되지 않았고 논쟁이 많은 것인데, 그렇게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론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분배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두 마리 토끼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 가지 않으면 둘 다 성공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에 관한 질문이었지요?

이것은 희망일 뿐입니다. 영원한 숙제입니다. 정치가 아주 발전한 나라, 성숙한 나라에서도 정책의 조율과정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생각이 다 다르고 사람의 의견은 입을 열지 못하게 닫아 놓을 수 없고, 그리고 취재진 여러분의 취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취재를 하면 모든 정책의 출발점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서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돼 나가는 것이 국회 같은 데서 법으로

확정될 때입니다. 이 과정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정책의 발전과정 또는 조정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이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통합돼 나가는 정책의 발전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정책과정에 대해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안정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 결론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 맞추기를 하는 분들은 조금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확정돼서 한 마디로 나오려면 다시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군주 시대로 돌아가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한 마디 딱 하면 그것은 진짜고 아니면 아닌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는 시대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정책결정 과정이고 정치적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질 문 ● 지금 일본에서는 ‘겨울연가’를 비롯해서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일본 천황 방한문제를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대통령 ● 일본 천황의 방한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언제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또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본 천황의 방한 자체를 막아 버리는 것은 합리적인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방한은 방한이고 또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문제로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한하신다면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질 문 ● 최근 대통령께서는 교육부총리 인사과동과 관련해서 대 국민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정무적 책임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의장인 김우식 비서실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주의 노선과 연관지어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직접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모

두말씀에서 동반성장 전략과 함께 그 관건으로 기술혁신과 인재육성, 특히 대학 혁신을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이번 인사파동 때 말씀하셨던 이른바 '대학은 산업이다.' 이런 명제가 이번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에서도 그대로 유효한 기준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통령 ●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두에서 낭독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올해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한 것이 또 궁금하고 많이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제 입장을 답변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최종적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우선 저의 사과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민정비서실이 지금 검증절차를 맡고 있지만,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검증범위가 모호했던 것 같습니다. 검증해서 의문시된 사실, 문제된 사실만 제대로 적어서 올리면 그것으로 민정비서실의 역할은 끝난 것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증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이 안 된다고 하면 임명이 불가능하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절차를 엄격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까지를 하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지는 것이 검증이냐? 사실까지만 책임을 지는 것이 검증이라고 하면 민정수석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인사수석은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것인데 국민들이 매우 불쾌해 하고 누구에게 뭔가 책임을 물으라고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책임이 무거워서 책임을 지고 책임이 없어서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번 인사처리는 국민들께 사죄하는 뜻으로 한 것입니다.

인사수석은 다행히 재임기간이 좀 길기도 했고, 민정수석은 부득이 해당 부서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비서실장 문제를 놓고 자꾸 노선 얘기를 하는데 이번 문제는 노선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선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우침이 없는 국정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저를 약간 개혁 쪽으로 치우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조금 덜 치우친 사람이 좋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깐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문책조치는 국민들에 대해서 청와대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문책일 뿐이지 실제로는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인선에 관해서 '대학은 산업이다.' 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말은 전부터 많이 썼습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공교육은 그야말로 인간적 품성을 함양하고, 시민으로서의 자질도 함양하고, 또 직업인으로서의 창의성이라든지 역량도 길러내는 것입니다. 공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인간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가면 소위 국민교육, 과거에 말하던 공민교육 또는 요즘 말하는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교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정책을 세워서 공교육으로 책임져 나가야 되는 중등교육까지는 공교육 색채가 아주 강하지만, 대학교는 이미 경쟁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고 그 전부터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대개 크게 반론이 없어서 아직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대학교육의 교육원리는 별개로 해야 한다,

별개의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중등교육까지는 우리가 평준화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학교육은 평준화 제도, 그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다양성은 있어야 되지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교육부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인사라는 것이 '신랑감 구하기' 하고 같은 것입니다. 아니면 기업에서 '임원 구하기' 하고 같은 것입니다. 다 좋으면 좋죠. 그런데 기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 보니까 마음에 속 드는 인재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딱 마음에 들면 어디 다른 데서 일하고 있거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도 그때그때 처한 환경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술개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해야겠다 하면 그런 CEO를 영입하려 할 것이고, 이번에는 시장에서 브랜드 싸움을 해야겠다 하면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하려 하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과제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중등교육까지는 일단 제 임기 동안에 해야 하는 과제들의 체계를 이미 다 정했고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까지는 대개 이렇게 체계를 잡은 것으로 보고, 금년과 내년에 계속해서 집중해 가야 될 과제는 대학교육의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육의 혁신을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또는 대학교육이 우리 경제계의 요구를 좀 반영해야 된다는 뜻에서 어떤 사람은 신문에 '경제계의 요구를 잘 아는 사람을 기용하라.'는 내용의 기고도 했더군요. 이런 것이 이제 두루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런저런 희망사항을 다 놓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 문 ● 앞으로 국무위원이나 청와대 참모진의 인선기준이나 원칙, 특히 검증 체계에 어떤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최근에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한적인 인사청문을 제안하신 바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 인선기준으로는 도덕성, 참신성, 능력,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이 그동안 신문에 계속 나왔습니다. 옛날에 작은 민주당 할 때 내놓았던 기준인데 아마 그게 보편화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뭐가 도덕성이고 참신성이고 능력이냐고 물어 보면 설명이 복잡합니다. 크게 봐서 능력하고 품성 아니겠습니까? 사심 없이 일할 것이다, 이것을 품성이라고 봐야겠죠. 절대적으로 깨끗하다는 것보다는 공사를 분명히 하고 사심 없이 일을 할 것이다, 이것이 도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옛날에 돈 좀 벌었다 안 벌었다라든가,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할 때 20년 전에 어디 가서 땅 한 필지 샀던 것이나, 공무원 퇴직해서 돈 생겼다고 땅 한 필지 샀던 것 가지고 검증한다고 하니까 어렵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표적을 이러한 것에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분명하냐, 사심 없이 앞으로 일할 것이냐, 그것이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치를 10여년 한 사람이니까 이미 참신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요? 지금 국회는 매우 참신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죠? 그렇게 참신성의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명분에 성실하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 명분에 충실한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참신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원칙 없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이지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료들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각료는 전문성과 더불어서 일반 관리를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라야 비로소 쓸모 있는 전문가이지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떨어지는 전문가는 각료로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다방면에서 통합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각료의 직무는 충분히 수행해낼 수 있다

고 믿습니다. 역대 각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문성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고 원칙은 이러하지만 실제 적용은 참 어렵습니다. 검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 보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일 해 본 사람들의 평가를 듣는 방법, 이런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도덕성이라고 얘기하는, 도덕적 하자가 없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관한 검증이 일반적으로 검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소위 장애사유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제도 개선은 지금부터 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바깥의 다른 기관에 검증을 맡기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을 맡을 만한 유사기관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부패와 도덕성이라는 게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이런 검증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업적이 나 징계에 관한 기록은 인사기록에 있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감사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평가기관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가고, 말하자면 도덕성의 부적격에 관한 문제는 청와대에서 정보기관에 의뢰해서 하던 것을 바깥으로 맡기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는지 고심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흘러왔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바깥에 맡기겠습니다. 대개 부패방지위원회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하는 사람의 폭을 좀 넓히자, 국무위원급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하자는 방안도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사실조사만 할 것인지, 부적격 판단에 관한 의견까지를 낼 것인지, 의견을 내면 대통령이 거기에 구속될 것인지, 아니면 참고만 할 것인지 이런 검증제도를 세밀히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신뢰가 훼손되는 일

이 없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입법까지 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중으로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질문 ●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상당수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대안에 대해 충청도민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이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이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추진돼 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격차 심화를 우려하시면서 동반성장을 강조하셨습니다. 지방의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 중소기업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방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화 시대, 매우 의욕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직 성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성과가 날 수 있는 문제라면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내걸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성과가 가시화될까 매우 걱정하면서 수립한 정책입니다. 성과가 5년, 10년, 그 이상 가야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을 가졌고, 이것은 꼭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이 과수원을 했는데, 복숭아를 심어 놓으면 3년 만에 작지만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감은 첫 열매를 따는 데 7년이 걸리고, 제대로 수확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그래도 저희는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뒤에 수입이 좋았습니다.

지방화라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정책을 채택하는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생각보다 많은 정책이 효과적으로 채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지금 열심히 활발하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협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협상하고 조정하는 도중에 오늘 무슨 결론을 불쑥 내버리면 오히려 일에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조정 결과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처음 행정수도 계획했던 것 못지않은, 실속에 있어서 못지않은 사업, 그리고 각 지방에서 기대했던 것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대역사가 아마 결정되고 또 추진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여러분 가정에도 하는 일이 전부 다 기쁨으로만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 경제 잘 되고, 또 미래 한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출발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